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고령운전자 면허 관리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연령별 면허 반납보다는 신체 나이나 기능에 근거한 제도 개선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는 이와 관련된 서울시의회 차원의 해결과제가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 발생 2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사고 당일까지 치료나 약물 복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된 치매 환자는 약 68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나, 같은 시기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환자는 약 105만 명에 달해, 실제보다 약 37만 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치매 환자 중 상당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등록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치매 증상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이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전문의가 치매로 인정한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치매 진단 이후의 절차와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어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운전자의 치매 진단 시 면허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둘째,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등 보호·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특별시경찰청 등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이 고령운전자의 신체나이 및 기능에 따른 운전면허 유지·반납에 대한 정책 시발점이 되고, 모든 시민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